향후 5년간 OECD 사회정책 개요

Overview of Future Work on Social Policy over the coming 5 Years[1)]

최 윤 정 OECD 아시아 사회정책센터 책임연구원

1. 들어가며

OECD 사회정책 장관회의(Social Policy Ministerial meeting, 2005. 3. 31~4. 1) 결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개최된 사회정책작업반(Working Party on Social Policy, 2005. 11. 17~18) 회의 내용을 이전 호에 이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 작업반 회의에서는 OECD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세부 과제와 예산 등을 다루었다. 추진 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2월 발간된 복지포럼에서는 첫째, 아동 행복과 가족 지원(Well-being of children and support for families) 둘째, 연금정책의 미래 사회경제적 함의(Future soci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pension polices)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이번 3월호에는 셋째, 노동시장의 장애인(Disabled people in the labour market) 넷째, 사회보장의 권리와 책임의 새로운 균형(A new balance betwee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social security) 다섯째, 생애 위험, 생애 주기 그리고 사회정책(Life risks, life course and social policy)에 대한 내용을 담고자 한다.

올해 수행 과제는 가족정책 관련 데이터베이스 개발, 연금개관 작업, 장애인 정책과 생애 주기 중의 재분배 등이다. OECD 위원회는 사회정책과제에 대한 OECD의 작업 및 예산 프로그램 관련 절차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장애인 관련 과제에서 청년층의 장애는 올해부터 2010년 까지 수행될 예정이며, 사회보장의 권리와 책임과제의 모형설정(modeling)과 생애주기 관련 전이점(transition points)에 관한 과제는 2009년에서 2010년에 수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1) 2005. 10. 27. Working Party on Social Policy. DELSA/ELSA/WP1(2005)9 참조.

2. 노동시장의 장애인

노동시장의 장애인(Disabled people in the labour market)에 대한 과제에서는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고용시장 참여 및 복귀를 지원하는 노동시장 정책을 다룰 것이다. 또한 OECD는 청년층 장애 문제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3년 OECD에서 출간된 '장애에서 능력 발휘로의 이동'(Transforming disability into ability)에서는 1980년대 이후 노동인력의 장애 경향(trends in the prevalence of disability) 및 장애 급여 수령 정책(sickness related benefit receipt)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이를 통해 고용 친화적 정책이 장애정책으로 선회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 및 계획으로 2005년 중기에는 OECD 사회정책부서와 고용분석 및 정책부서가 공동으로 'OECD 업무동기 향상을 위한 질병과 장애 정책 개혁에 대한 주제검토'(OECD Thematic Review on Reforming Sickness and Disability Policies to Improve Work Incentives)를 시작하였으며 이 연구는 선별된 OECD 국가에 대한 질병 및 장애 정책을 검토 및 평가를 한다. 또한 질병 및 장애 프로그램(sickness and disability benefit programmes)에 대한 지출 감소 및 관리 정책(유입정책, inflow management)과 수급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유출정책, outflow management)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건강상 문제와 장애를 가진 개인이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소외되는 기제 및 정책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3~4개 국가 현황에 대한 비교 보고서를 연속하여 출간할 예정이며, 2005~06년 첫 번째 연구는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장애에 대한 유입수준이 높고 강력한 고용보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나 정책 개혁 및 기획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는 질병으로 인한 결근을 줄이기 위한 삼자간 합의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폴란드는 경제 전체에 대한 할당제도(quota system)를 도입하고, 스위스는 예방적인 조치들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06년~07년, 2007년~08년에 두 개국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계획되어 있다. 향후 논의에 따라 호주,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페인, 영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10~12개 국가 검토 연구가 마무리되면 세 번에 걸친 연구결과와 정책적 문제를 분석한 종합 보고서가 출간될 것이다.

또한, 질병 및 장애 관련 지표 및 정책 데이터베이스작업에 대한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2003년 '장애에서 능력 발휘로의 이동'의 보고서에서는 정책적 원칙 및 제도의 특성, 주요 통계지표에 대

한 자료 비교 및 평가를 하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2000년까지의 자료만 제시되어있다. 또한 30개 OECD 회원국 중 20개국만 다루고 있으며 내용에서 질병 관련 정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OECD 사무국은 모든 회원국이 포함된 2005년 통계지표와 정책적 원칙들을 제시하기 위해 포괄적인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될 것이다. 첫 번째 비교 부분은 다음과 같은 통계 지표들을 분석하고 수치를 제공할 것이다. ① 성별, 연령, 교육, 직업에 따른 장애분포율(disability prevalence rates) ② 질병에 의한 결근율(sickness absence rates) ③ 질병 휴가 및 장애 급여(sickness leave and disability benefits) 부문에 대한 유입 및 유출 ④ 장애인 고용 및 실업률 ⑤ 순급여지급율(net benefit payment rates) ⑥ 장애 인력의 수입 및 수입원 ⑦ 질병 및 장애 관련 제도의 주요 특징 등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국가별 질병 및 장애분야의 정책과 최근 개혁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5년 마다 질병 및 장애 지표 및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2007년 시작하여 08년 출간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장애에 대해서는 2005년 OECD 교육부서의 교육, 연구 및 혁신 연구소(CERI,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는 '장애 아동 및 청년 특별 교육 프로그램 및 질적 이행(transition) 결과'에 대한 5개년에 걸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과제의 내용은 노동 참여의 결과와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의 상호 관련성과 장애자, 그 가족, 제도적 구조와 관행의 특징 및 공공정책과 입법상의 주요 변수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다. 또한, 정규 및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정책이 검토될 것이다.

3. 사회보장의 권리와 책임의 새로운 균형

OECD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인력 집단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 정책, 법적 조치, 재정적 유인책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정책이 중요한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수급자들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데 방해가 되는 제도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보장의 권리와 책임의 새로운 균형(A new balance betwee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social security)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최근 OECD에서는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2005년 고용 전망'(Employment Outlook)에는 OECD 고용전략 재평가(reassessment of the OECD Jobs Strategy)의 일환으로 고용주의 이익과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혜자에 대한 법적 조치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급여와 보수'(Benefits and Wages)에서는 가계 수입과 노동 유인에 대한 세제 및 급여제도의 영향이 다루어졌다. 노동시장의 한계 인력에 대한 논의는 2003년 노동장관회담(Employment ministers)의 주요 의제였으며 이 회담의 결과와 사회정책장관회담 관련 문건들에는 실업급여 수혜자들이 직면한 장애요인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아이와 상사'(Babies and Bosses)와 Jaumotte(2003)의 OECD의 계량경제 연구에서는 육아를 하는 부모들의 문제를 다루었고 '고령화와 고용'(Ageing and Employment) 시리즈와 Duval(2003)의 계량경제 연구에서는 노령 노동의 문제를 다루었다. 장애 인력 문제는 '장애에서 능력발휘로의 이동'의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제안된 연구 계획으로 장관회담의 결의와 관련된 주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비정규직이며 불안정한 노동 구조와 사회보장제도 둘째, 기존 사회보장 체계 하의 권한 및 책임, 셋째, 고용 및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등이다. 앞에 언급된 첫째 주제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로 기존 사회보장 정책들이 개인 특히 비정규직 혹은 '비전형적'(atypical)인 근로인을 적절히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변화를 수용하는 노동시장은 특정 집단에게는 위협이 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노동 조건이 다양화되면 직업 선택 기회가 확대 될 것이다. OECD는 비전형적인 직업과 비정규적인 근로조건을 가진 개인 및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의 상황을 조명하였고 시간제 근로자, 자영업자, 노령 인력, 유자녀 여성, 이민자 및 주기적인 실업에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제로는 노동과 실업의 구조 및 비정규 고용의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특히, 비정규 형태고용(non-traditional work)에 적응한 개인들과 불안정 고용상태(precarious employment)에서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개인들을 구별할 것이며 이는 비정규직 개인의 소득, 가정환경, 고용형태에 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보고서는 사회정책 형성과 관련하여, 근로 및 급여 소득 집단과 급여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근로 소득자 집단의 정책적 수요를 확인하여 정책 과제와 전략 수립을 하게 될 것이다. 노동조건의 유형 분석은 상세한 미시적 데이터를 기초로 이루어 질 것이다. 단면적인 자료로는 시간제 근로나 자영업과 같은 비정규 노동에 대한 분석은 할 수 있으나 동적인 노동조건 특히, 불안정 고용에 관한 분석을 위해서는 장기적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가 있는 국가는 장기적 미시데이터나 행정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게 된다. 연구 결과는 비정규 및 비전형적인(irregular/atypical) 근로 유형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다. 보고서에는 정책 형성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측면은 다른 과제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둘째, 기존 사회보장 제도 하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한 연구는 사회보장정책에 있어 상호의무에 대한 측면을 평가하며, 급여 수혜자, 정부, 고용주의 역할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과제로 수행할 것이다. 수급자의 의무에 대한 과제는 급여 수혜자의 행동 요건에 대한 보고서를 낼 것이며 특히, 노

동시장에의 유예 및 편입을 강화(maintaining or furthering labour market attachment)하고 사회적 소외를 감소(limiting social exclusion)시키기 위한 교육 등의 구직활동 환경 및 행동 등의 요건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기존 혹은 현재 진행 중인 OECD 활동의 주제는 실업급여의 대상 및 행동 요건에 대한 구직 전략 검토와 같은 연구들이 있다. 제안된 과제는 사회보조, 신생아 양호 휴가급여, 양육수당, 편부모급여, 장애급여와 같은 다른 실업 관련 급여들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행동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 청년 및 노년 실업자와 유자녀 실업자를 포함한 특정 수혜자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재의 유형과 행동적 요건 충족을 감시하는 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보고서는 국가별 혹은 수혜 범주별로 급여 수혜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의 차이에 대해 다룰 것이다.

사회보장정책의 범위에 대한 과제로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노동형태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특정 집단이 소외되어 혜택이 필요한 집단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제는 정부가 현재 노동시장에 있는 인구와 실업상태의 비정규 인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재정지원의 제도적인 특징, 보장의 범위, 양육 보조와 같은 서비스의 접근 정도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실업인구와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인구 가운데 어떤 집단이 우호적인 노동시장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보고서는 실업 집단별 지원 정책과 함께 사회적 지원 및 고용 지원에 고려해야 할 요소 등을 포함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집단을 확인하고 불합리한 급여를 받고 있는 집단에 대한 분석도 할 것이다.

고용주의 역할에 대한 과제(the role of employers)에서는 고용주가 사회정책 수행의 직접적인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고용주는 질병수당 지급, 양육 휴가 제공, 장애인을 고용, 특정 노동자 융통적인 근로 시간제 허용 및 연금 지급 등의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것이나 고용주의 사회정책 행위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별 자료뿐 만 아니라 국가 내의 자료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원을 이용할 것이다. 한편, 사회 급여가 고용주들의 고용 및 해고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할 것이다. 일시적인 경기 침체나 주기적인 수요변화에 직면하여 한시적으로 노동력을 해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전 연구 결과에서 고용 효과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현재 제한적인 몇 개 국가의 해고율에 대한 연구로는 다양한 국가 상황에 따른 정책적 가치를 예측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는 다양한 국가 고용주들의 의무와 효과를 측정하는데 고려할 요소들에 관한 연구 결과를 포함할 것이다. 과제는 2007년~08년에 걸쳐 수행될 예정이다.

셋째, 고용 및 사회보장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policy options for improving access to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들에 대한 연구는 '급여와 급료'(Benefits and Wages)나 '연금개관'(Pensions at a Glance) 등의 OECD 사회보장제도 관련 보고서들은 기존 정책의 특징, 분석 및 기대 효과에 대한 비교 및 설명을 서술하고 있다. 방법론상 '최적'(optimal)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향적인 분석 및 시뮬레이션 방법이 사용되며 예를 들어, 최적의 실업급여 설계를 위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 중이며 주어진 사회보장 지출수준에서 실업자들에게 최대한의 사회보장을 제공할 것인지 또는 가능한 최저 공공 지출수준에서 현재의 보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는 급여의 지급 기간 및 구성 방법이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에 미치는 요인보다 근본적인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은 구직활동에 대한 재정적인 유인의 영향을 설명하는 소위 구직모형(job- search models)을 근거로 하고 있고 이러한 유인들을 구조화함으로써 고용효과와 정책대안 설계의 비용 비교가 가능하다. 급여와 임금의 맥락에서 기존 정책 모형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관련 정책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특정 안을 선택할 경우의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조건하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단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장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두 가지 정책 개혁으로 해고율(experience-rating)과 생애 위기, 생애 과정 그리고 사회보장 결의에서 개인예금계좌의 역할(individual saving accounts)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급여 지급 및 법적 제재의 시간에 따른 상호작용에 관하여 다룰 것이다. 급여지급 시기(timing of benefit payments) 및 법적제재(imposition of sanctions) 연구는 급여수준과 노동유인의 교환 요인을 완화하여 정책결정자들에게 보다 많은 결정의 자유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급여 수준을 감소시킴으로써 실업기간을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구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보다 활발한 구직활동을 초래할 수도 있는 법적제재는 실직기간 동안의 수입이 특정 수준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향후 고용 시 유인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까지 연기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구직 활동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업을 조기 종식시키는 관련 조치들이 다수의 국가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한 조치들은 실업 급여 수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는 사회정책 설계에 있어 노동시장의 조건과 사회정책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포함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책의 유효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초기 한계 세율의 중요성, 수입의 배분, 실업 급여의 수준에 관한 OECD의 '고용 증진 정책'(making work pay)과 같은 맥락이다. 2009~10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다.

4. 생애 위험 , 생애 주기 그리고 사회 정책

OECD는 생애 위험, 생애 주기 그리고 사회정책(Life risks, life course and social policy) 과제 수행을 통하여 사회적 및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한 최상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이행 시기(transition points)"의 결정적인 순간에 정책 개입을 하거나, 생애 과정 중 특정 시기의 수입을 다른 시기로 재분배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생애의 전 과정에서 효과적인 사회정책의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최근 OECD 활동으로 생애의 주기 중 주요한 이행과정들에 주목하고 있으며 ELSAC(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은 학교로부터 취업으로의 이행에 관한 국가별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이와 상사'에서는 자녀의 출산 이후 양육기간 중 노동시장에서 유리되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장애정책은 장기 질병의 시작으로부터 출발한다. 퇴직결정 관련 내용은 노인 노동 연구로 이루어 졌고 퇴직 유인제(incentive to retire)와 같은 다른 측면들은 연금평가 연구(pension monitoring work)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촉진 정책들은 생애과정의 연구 중 주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민특별위원회(working party on migration)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월에 개최된 ELSA 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주제 하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OECD 사무국과 협력할 전문가 집단을 선정[2]하기로 하였다. OECD 사무국은 향후 프로젝트 수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집단과 계속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제안된 활동으로 첫째, 생애 과정에 걸친 재분배(redistribution over the life course) 관점에 있어 급여 배분의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일시적인 노동시간의 연장 혹은 단축, 결혼, 출산, 양육 및 기타 요양에 대한 급여 지급, 누진적이거나 융통적인 조기퇴직제도(progressive/flexible early retirement schemes), 안식년제도(sabbatical/career breaks), 연수 휴가(learning leaves)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시간에 따른 재원의 재분배를 함께 고려하지 않고, 생애과정의 재분배 시기에만 주목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예를 들면, 남성 근로자의 경우 유급일 경우가 아니면 거의 양육휴가나 안식년과 같은 휴가 제도를 선택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실직기간 동안의 소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미래 수입의 일부를 차용할 수 있지만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핵심적인 사회적 변수로서의 부의 재분배 기능에 주목하게 한다. 일부 OECD 국가들은 명시적인 정책을 통해 개인과 가계들이 급여 가운데 한 가지에 관하여 생애의 기간 동안 재원을 분배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권 사회'(ownership society)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정책 수단 가운데 일부는 부의 축적을 저해하는데 특히 자산조사 기반 급여(means-tested benefits)의 '자산평가'(assets tests)의 경우가 그러하다. 자산 보유를 통한 사회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역담보 제도(reverse mortgage scheme)가 필요하다. 현금이나 시간은 다음과 같은 제도로 재분배될 수 있다.

- 생애과정 저축제도(life-course savings schemes), 실업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금액을 저축해 놓도록 하는 제도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공식적인 종신저축계좌(life-time savings accounts)를 도입하였다.
- 개인이나 가계로 하여금 급여 수급권 가운데 일부(예를 들면 가계 지불)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어린 자녀를 둔 가계는 단기간의 실업 상태에서 재원을 조달하므로 보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 자산기반 복지(asset-based welfare) 프로그램을 통해 생애주기 동안 자산을 재분배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으로는 특정 환경에 처한 개인들이 현시점에서 투자한 후 생애의 다른 시기에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기부'(endowments) 제도와 특정 개인의 저축을 공적부문과 조화를 이루어 자산으로 축적을 장려하는 '조화된 기금프로그램'(matched savings programmes)이 있다.

주요한 주제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걸친 재분배, 소득계층 간의 재분배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수입이 저축하기에 불충분하다면 저축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초기 연구는 OECD 국가들의 생애 과정 중 다양한 정책 개입의 실태와 정책의 특성에 대해 다루게 될 것이다. 추가적인 연구는 생애과정에 걸친 재분배로 인한 세제나 급여체계 상의 변화와 OECD 국가에서의 부의 분배를 통한 민간 부문의 재분배 고찰 부분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연구를 통해 개인의 생애 과정에 걸쳐 시간과 자원의 재분배 정책들이 제시될 것이며 2006년 과제가 시작될 것이다. 재분배의 시기에 관한 기존 정책의 분석과 같이, 생애 과정의 소득과 시간의 재분에 관한 자산기반 복지(asset-based welfare) 정책연구가 2007~08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이행 시점(transition points)에 대한 연구는 생애 과정의 '정상적인 경로'(normal path)로부터의 이탈은 소득과 안정적인 고용, 직업과 가사의 균형, 교육과 훈련 등의 경험 보다 개인의 복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로의 진입 혹은 이탈 등의 정책 분석

2) DELSA/ELSA/WP1(2005)17 참조.

은 중요하다. 남성과 여성은 상이한 방식으로 이행과정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정책 입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행과정의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소외 계층인 장기 빈곤 계층에 초점을 둘 것이며 또한, 후향적인 방법으로 생애기간 중 특정 이행시점에서 발생하여 지속적인 악영향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찾아낼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장기적 데이터들이 사용될 것이다. 연구 결과 보고서에는 생애의 주요 전환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에 관한 포괄적인 평가가 포함될 것이다. 2009~10년에 걸쳐 사회정책 개발에 있어 전환기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5. 나오며

OECD 사회정책 관련하여 향후 5년간의 관심주제를 대략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은 현재 우리가 접한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 OECD 사회정책 장관회의에서 제시된 주제에 대해 OECD 작업반에서는 세부 실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이전 호에 이어 셋째 과제로 노동시장의 장애인 넷째, 사회보장의 권리와 책임의 새로운 균형 다섯째, 생애 위험, 생애 주기 그리고 사회정책에 대한 내용이다.

현재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혜택을 주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정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의 충족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이다. OECD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인구계층을 다각도에서 조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과제는 주제별로 관심있게 다루고 있다. 과거의 사회보호 관련 정책은 현물과 현금 급여 등 형태의 혜택에서 개인 및 사회적 소외 및 불평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며,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사회적 취약계층 뿐 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사회보장이 이루어져 안정된 사회경제적 성장을 토대로 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